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06호
2019. 4. 29

정책동향

-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문제 해소 '불충분'
- ▮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법령 개정과 소급 논란

시장동향

- ▮ 건설산업 기술인력의 경쟁력 실태와 전망

산업정보

- ▮ 스마트 건설 : ① 국내·외 동향과 건설기업의 역할
- ▮ 스마트 건설 : ②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원소식

건설논단

- ▮ 다시 하이에크를 읽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문제 해소 ‘불충분’

- 조사 대상 사업 범위의 총사업비 상향 등을 통한 근원적 접근 필요 -

■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종합평가 비중 개편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3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후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문제, 사회적 가치 대두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있어서는 조사 기간의 증가와 거버넌스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및 정부 지출은 지난 2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함.
 -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은 1999년 567.9조원에서 2018년 1,782.3조원으로 3.1배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지출 및 순융자는 1999년 121.0조원에서 2017년에는 379.8조원으로 3.1배 증가함.
- 그 사이 국내의 소비자물가는 1.6배 상승하였으며, 건설공사비는 2.2배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5.2p에서 2018년 104.5p로 1.6배 상승하였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2000년 1월 57.9p에서 2018년 12월에는 129.7p로 2000년 1월 대비 2.2배 상승함.
- 지난 20년간 정부의 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도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순인구 이동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수도권의 GRDP가 지방의 GRDP를 추월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종합평가 비중 개편, 정책성 평가 내실화,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종합평가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수도권은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배제함. 그리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부분 5%p 하락, 지역 균형발전 부분 5%p 상향으로 각각 평가 가중치를 조정함.

-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성 부분에 정책 효과 항목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일자리, 주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 등은 특수 평가 항목으로 별도 고려할 계획임.
- 복지 및 소득 이전 사업의 평가에 있어 수혜 계층 및 전달 체계 개선 등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둠.
- 기존 조사기관이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종합평가까지 수행하던 방식을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이,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이원화할 계획임.
-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을 기존 2곳(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 1곳을 추가해 3곳으로 늘릴 계획임.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증가에 따라 철회 및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점검단을 운영하여 조사 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임.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이면서 과감한 접근 필요

- 이번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일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으나, 근원적 문제 해소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비중의 하향과 지역 균형발전 비중의 상향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지나친 경제성 강화로 인하여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조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철회 및 재요구 요건 완화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나, 이는 오히려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지나친 간섭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근원적 문제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상향하고 다수의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보다 과감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 현재 500억원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으로 하면 220억원 수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음. 따라서 1,0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 상향을 통해 조사 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조사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조세재정연구원 한 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통과율 등에 따른 기관들의 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이나 서울연구원과 같은 지역 연구를 지정하고, 기존 경험이 축적된 한국개발연구원은 관리 감독에 주안을 두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법령 개정과 소급 논란

- 부칙 조항의 일부 보완 통해 부동산시장 내 불신 해소해야 -

■ 지난해 연말 이후 감소하던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임대주택 소폭 증가

- 2019년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4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 4000명임. 등록 임대주택은 1만 1,057채 증가하여 총 139만 9,000채에 달하고 있음.
 - 지역별 임대사업자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08명이 신규 등록한 서울이 전월(1,736명) 대비 15.7% 늘었고, 4,198명이 신규 등록한 수도권 전체가 전월(3,634명) 대비 15.5% 증가함. 반면, 지방에서 등록된 신규 임대사업자는 1,276명에 그쳐 전월(1,477명) 대비 13.6% 감소함.
 -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3,839채가 신규 등록된 서울이 전월(3,401채) 대비 12.9% 증가했고, 7,824채가 신규 등록된 수도권 전체가 전월(7,254채) 대비 7.9% 상승함. 반면, 지방의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3,233채로 전월(3,439채) 대비 6.0% 감소함.
- 이처럼 민간 임대시장에서도 서울 및 수도권의 증가세와 지방의 감소세로 대비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확산함.
 - 당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시 각종 혜택들이 제공되었으나 이후 세제 혜택 축소와 과태료 강화 등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시장에 실망감이 번졌음. 이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이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 증가가 집중됐음. 그 결과 지난해 연말 이후 감소하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건수가 올해 3월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풀이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소급 적용 여부 논란이 일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제44조와 소급 논란

-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 원문 부칙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제44조 제1항 2호 단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최초 임대료(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포함)는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 최초 임대료는 등록 당시의 임대료가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큼.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장 예민해 하는 부분이 임대료 인상과 임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의 인상 폭을 좌우하는 최초의 임대료 기준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음.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료 수준에 변경이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의 임대료가 기준으로 적용됨.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치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비칠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해명과 달리 논란의 여지는 충분함.

■ 친절한 해명보다 명확한 규정 보완 필요

-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까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개정 법률에 맞추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개정 법률 시행까지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 인하여 임대료 조정이나 임차인 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뒤로 등록을 미루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회복되기 시작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위축될 수 있음.
- 현재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의 정책 변덕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임. 단순히 '가짜뉴스', '꼼수 해소나 법률에 대한 오해'라는 정부 해명보다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부터 임대료 규정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 2018년 8월 14일 개정된 동법(법률 제15730호)의 부칙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임대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던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두성규(선임연구위원 · skdoo@cerik.re.kr)

건설산업 기술인력의 경쟁력 실태와 전망

- 기술 역량 하락, 적정 대가 부족, 고령화 등으로 산업 경쟁력 하락 -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하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18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12위를 기록함.¹⁾
 - 최근 3년간 해외 매출은 설계 분야와 시공 분야 모두에서 20%대의 하락 폭을 보임.
 - 건설기업의 2018년 시공 경쟁력은 7위에서 10위로 하락했고, 설계 경쟁력은 13위에 그침.
- 그동안 해외 건설사업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재와 기술 역량의 부족이 언급되어 왔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 기술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닌 기술의 향상에 달려 있으며, 향후 건설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인력의 역량 향상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건설 기술인력의 현황

-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점차 낮아져 왔으며, 산업의 경쟁력 하락도 기술과 기술자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산업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0년간(2008~2018년) 건설 및 기타 기술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 단가를 살펴보면, 특급기술자(1.6%)와 고급기술자(1.8%)의 연평균 증가율은 건설업 일반 직종(6.5%)에 비해 크게 낮았음.

<표 1> 엔지니어링 기술자(건설 및 기타 기술 분야)의 노임 단가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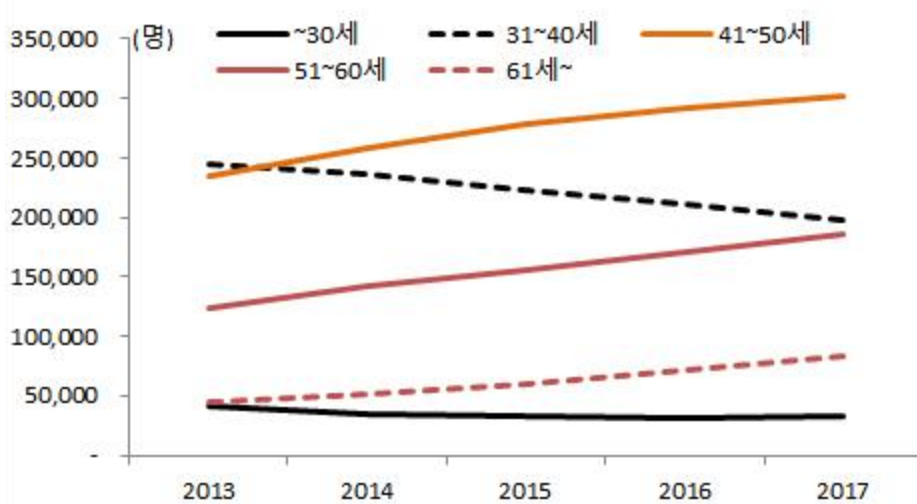
연평균 증가율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업 일반 직종
1998~2008	5.5%	5.9%	5.6%	5.8%	6.2%	4.6%
2008~2018	2.1%	1.6%	1.8%	2.3%	3.1%	6.5%

자료 : KOSIS 통계표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및 '건설업 평균임금 현황'을 사용하여 계산함.

1) 매일경제(2019. 4. 2.), "샌드위치 신세 한국 건설산업 경쟁력 세계 9위 → 12위 추락".

-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노임 단가 증가율이 건설업 일반 직종의 임금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은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실태를 보여줌.
- 한편, 기술인력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기술인력은 감소하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 신규 인력의 진입 감소는 건설산업의 활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 주력 인력인 50대 이상 기술자의 은퇴가 시작되는 10년 뒤에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건설 기술인력의 연령별 추이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기술인력 육성과 활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술력 저하, 필요 인재의 부족, 청년층의 진입 감소 등은 일차적으로 기술에 대한 대가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함.
- 우선 가격이 중시되어 기술과 품질이 아닌 가격이 낙찰을 결정하는 공공사업 기초의 변화와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공공 발주자는 평가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얻고자 기술자 등급과 같은 계량적 평가 기준을 활용해 왔지만, 이는 계량적 기준 만족을 위한 PQ용 기술자의 양산으로 이어져 왔음.
 - 발주자는 기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과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함.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스마트 건설 : ① 국내외 동향과 건설기업의 역할

- 기업 차원의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활용,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전략과 계획 필요 -

■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제시

-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는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스마트 기술을 건설산업 내에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한 각종 계획, 방안, 로드맵 등을 제시함(<표 1> 참조).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스마트 건설기술로 BIM,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지능형 건설장비, 모듈러, 3D 프린팅 기술 등을 제시함.

<표 1>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주요 정부 정책

구분	정부 정책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2017,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 • 2018, "건설산업 혁신 방안" • 2018,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 2018,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 및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 및 센서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 드론, 로봇 및 지능형 건설장비 • 모듈러 및 3D 프린팅 • 친환경 건축

■ 스마트 건설기술, 미래 기술 아닌 실용화 단계에 진입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분석함(<표 2> 참조).
 -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로 사물인터넷, 드론, 증강현실, 가상현실, 모듈러, 3D 프린팅, 로봇, 지능형 건설장비를 선정하여 관련 스타트업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스마트 건설기술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 또는 솔루션의 적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스카이캐치는 드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벡텔(BECHTEL), 스칸스카(SKANSKA), DPR 등의 글로벌 건설기업에 적용된 바 있음.
 -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사례의 증가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표 2> 글로벌 건설 스타트업과 제공 기능

기술 구분	스타트업	주요 제공 기능
사물인터넷	 rayven	• 날씨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예측 및 분석, 생산성 및 프로세스 최적화, 건축물 유지관리 최적화, 장비 모니터링
드론	 SKYCATCH	• 현장 데이터 수집, 2D 및 3D 시각화, 측량 및 모델링
증강현실	 HOLO BUILDER	• 현장 시각화, 협업 지원, 관리자 대시보드
가상현실	 IRISVR	• 사업참여자 통합 회의 지원, 시공 시뮬레이션, 이슈 사항 추적 관리, 자동 보고서 생성
모듈러	 KATERRA	• 모듈 기반의 공장 제작 후 현장 시공 방식 적용,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 및 공급망 제시
3D 프린팅	 MX3D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금속 프린팅 제품 생산
로봇	 Construction Robotics Advancing Construction	• 리프트 보조 로봇과 반자동 조적 로봇 개발
지능형 건설장비	 KOMATSU	• 반자동화 수준의 굴삭기와 불도저 개발, 건설장비 기반의 현장 측량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글로벌 기업은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중

- 대표적인 글로벌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인 벡텔(Bechtel)²⁾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도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벡텔은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의 건설현장 혁신 전략인 ‘Project 2020’을 통해 현장의 ‘Safer. Better. Faster. Leaner’를 추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혁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아이디어 창출, ② 평가, ③ 프로토타입의 제작, ④ 파일럿 테스트, ⑤ 기술 적용’ 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를 제시함.
 - 이러한 혁신 전략과 프로세스를 통해 벡텔은 이미 건설현장 내 빅데이터, 드론, 로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등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음.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 필요

-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사업의 주체는 기업이며, 스마트 건설기술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활용 가능한 기술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건설기업은 스마트 기술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한 혁신 전략과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구체화해야 함.
 - 예를 들어 기업 차원의 ① 디지털 전환, ② 프로세스 혁신, ③ 스타트업 기업 활용, ④ 경쟁력 차별화, 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⑥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전략·계획·방안을 확보해야 함.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2) 벡텔 홈페이지(<https://www.bechtel.com/about-us/vision-values-covenants>), 2019. 4. 24일 참조.

스마트 건설 : ②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 맥킨지,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에 정부 역할 강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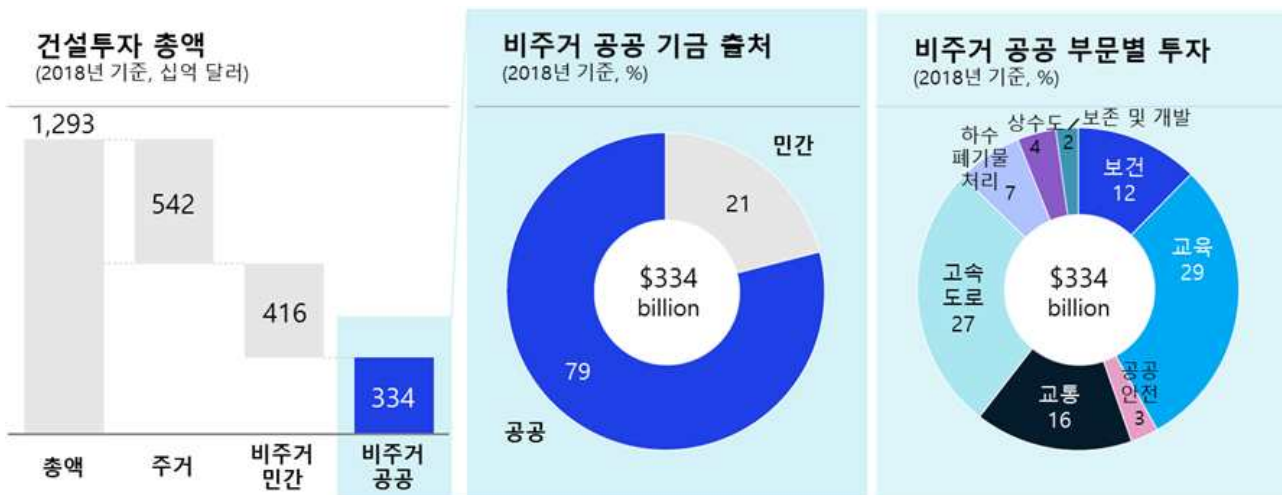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필요성 점차 확대³⁾

- 스마트 기술의 활용으로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나,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한 내부적 프로세스 부족과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설산업이 점차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사업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자동화, IoT(Internet of Things), 고급 분석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의 활용은 산업 전반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은 타 산업보다 뒤처지는 상황임.

■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정부 역할 매우 커

- 미국의 경우 공공 인프라 투자 금액은 2018년 기준 약 3,34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약 80%가 정부의 투자로 이루어짐(<그림 1> 참조).
 - 2018년 미국의 건설투자 총액은 약 1조 2,903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매년 약 7.4% 상승함.
 -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금액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⁴⁾

<그림 1> 미국 공공 인프라 투자 현황



자료 : McKinsey&Company, U.S. Census Bureau, 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 at a Glance(2018.12).

3) McKinsey&Company, Governments can lead construction into the digital era(2019. 4).

4) 맥킨지는 미국 인프라 사업에 2017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 맥킨지, 스마트 건설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부의 다섯 가지 역할 제시

- 대담한 포부 설정
 - 우선, 공공공사에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설정해야 함. 예를 들어 사전 제작(prefabrication) 방식 혹은 모듈러(modular) 주택의 도입, BIM의 활용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의미 있는 인센티브 창출
 - 건설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프로젝트의 스마트 기술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해 상금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신기술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음.
- 위험 관리
 - 정부는 스마트 기술 도입과 관련한 위험과 장벽을 줄여줘야 함.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기업에 제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기술의 초기 도입으로 인해 예상 비용 절감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투명성 확보
 -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가져옴.
- 능력 제고
 -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필요한 역량 구축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우리나라도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 정부는 건설투자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산업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음.
 - 정부는 인프라 투자의 핵심 주체이며, 건설기업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또한 교통, 상수도,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건설사업에 있어 기업이 기존의 관습대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일종의 관성을 깨뜨릴 힘을 가지고 있음.
- 건설산업의 신기술 도입과 이를 통한 획기적인 비용 감소와 공기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9	기획재정부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회의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 참여
4.1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업종 TFT 회의에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 참여
4.23	국토교통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종합시책 회의에 법제혁신연구실 김민형 선임연구위원 참여
4.25	민주당 정책위	• SOC 투자의 방향 전환 토론회에 미래기술전략연구실 이영환 선임연구위원 참여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연구자료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1980년대 압축 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이후 실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노후 인프라 시설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황 조사와 대책 마련, 재정투자 확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① 이론적 검토, ② 국내 인프라 노후화 실태 분석, ③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함. • 우선 노후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로는 인프라 투자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 ①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② 국가 경쟁력 제고, ③ 미래 국가 재정 부담의 완화, ④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⑤ 국가 기반산업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유도 등 주요 5개 요인을 들 수 있음. • 나아가 국내 노후 인프라 현황 조사 및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동향 분석을 통해 8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p>구체적으로 ① 적정 규모의 인프라 투자, ② SOC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③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와 기술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④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확대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체계적 추진, ⑥ 지역 노후 인프라 사업 추진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⑦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⑧ 민간 투자사업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등임.</p>

연구 활동

제목	주요 내용
지역 건설업 활성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및 제도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건설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 중인 연구 용역과 정책 지원 활동 - 서울특별시 발주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수행 중 - 충청남도 발주 "건설업 혁신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개선 방안 연구" 수행 중 - 경상북도, 기관·단체·건설사 상생 협력 및 간담회 관련 정책 수립 지원 - 전라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지원 - 감사원, 지자체 불공정 관행 개선 활동 지원

다시 하이에크를 읽다

모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 모두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례가 많다. 지금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문득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본산이라 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당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197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1944)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 1940년대의 영국도 최저임금이나 소득 보장, 분배적 정의, 대기업 독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것 같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하이에크는 영국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조직화하여 사회주의적 이상을 달성하려는 듯한 사상적 흐름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는 영국과 베네룩스 3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상업의 성장과 함께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독일은 집단주의적, 군사적 사회의 성격이 강했다. 당시의 독일에서는 학교와 언론이 젊은 세대에게 ‘상업적 기업가 정신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이윤 창출을 부도덕한 것으로, 백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착취로 보면서 같은 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예로운 것으로 보도록 가르쳤다고 한다. 그런 사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보장된 봉급을 받는 관료가 되는 것을 창업하는 것보다 더 선호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현재 우리의 고용 사정은 ‘참사’라고 할 정도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취업자 증가 수를 기록

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지난 1월에 일시 회복되긴 했지만, 경기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동반 하락세는 장기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을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부가 가격과 임금을 명령과 규제로 통제하게 되면 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하이에크는 당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중시했던 이상을 추구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말 소득분배 상황을 보자. 작년 4분기에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 대비 18%나 급감했지만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0.4%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분명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나 의도와 상반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념적 편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케인즈와 같이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시각과는 다른 점이 많다. 아마도 마르크스 경제학자라면 더욱 심하게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이론이나 사상의 옳고 그름은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론과 사상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하이에크의 이론과 사상은 우리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것 같다. 다시, 하이에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2019.4.3>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